

최종 성명서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제7차 세계 종교인 협의회**

일본 헌법 제9조 및 아시아 평화  
오키나와에서 온 기도

2021년 3월 6일  
오키나와 - 도쿄, 일본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세계의 정의와 안보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 국민은 국가의 주권으로서의 전쟁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위협이나 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전쟁 잠재력뿐만 아니라 육,해,공의 군대는 결코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호전성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9조 세계 종교인 협의회 (9조 협의회)는 정의와 평화를 기원하고, "세계평화의 상징"인 일본 헌법 9조의 정신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일에 종단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신앙적 헌신을 모으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 협의회는 2007년(도쿄), 2009년(서울), 2011년(오키나와), 2014년(도쿄), 2016년(오사카), 2018년(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 7차 협의회에는 일본, 한국, 영국, 필리핀, 중국, 대만, 괌,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총 121명이 참가하였다.

금번 협의회 참석자 중 많은 이들이 원자력 발전과 인류에 대한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후쿠시마 아이즈와카마쓰시에서 열린 2012년 핵문제 종교간회의에도 참가하였다. COVID-19의 상황 속에서, 제7차 협의회는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2021년 3월 2-3일, 이를 동안 진행되었고, 우리 참석자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전 세계가 무력이 아닌 대화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정의로 평화를 실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

1) COVID-19은 전 인류의 문제가 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인들의 연대를 요구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인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백신 배포를 통해 COVID-19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칙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핵 위기, 기후 변화, 해양 플라스틱 오염도 인류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 배제 또는 분열의 경험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2)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오키나와 전투로 희생당했고, 전쟁 후에는 미군의 지배하에 놓였으며,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 후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방위 준비의 핵심 지역으로 미군주둔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짊어 지고 왔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파괴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체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헤노코에서의 새로운 기지건설 중단

을 요구한다. 오키나와 국민 대다수와 연대해 헤노코의 새기지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들의 유해가 담긴 흙을 매립지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분노를 표한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철수가 시급한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난세이 제도에 일본 자위대(SDF)가 증강 배치되는 것과 오키나와에 중거리 핵병력이 배치되는 것 또한 강력히 반대한다. 일본,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은 다시는 오키나와를 전쟁에 개입시키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군국화된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던 지난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제9조는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일본의 약속과 다시는 전쟁을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에 반대한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안은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은 이웃에 위협이 되어서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원천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선제사용" 금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핵무장국 정부들에게 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 을 빌미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4) 일본 정부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한 인정은 동아시아 지역 평화의 밑거름이 된다. 일본 정부는 단지 헌법을 수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 침략과 식민주의를 인정한 이전의 정부들의 공식 성명, 즉 1993년 고노 선언, 1995년의 무라야마 선언, 2010년의 간 선언 등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스가 총리와 현 자민당 정부는 이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식민지배와 전쟁 범죄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정의와 범죄, 즉 위안부와 강제징집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뉘우치고 이웃 국가들과 평화를 원한다면, 일본의 재일한국(조선)인과 다른 소수민족 공동체에 대한 혐오 발언의 문제도 제대로 다뤄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 관료들이 A급 전범이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반대한 이전 협의회들의 성명들 또한 거듭 강조한다.

5)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9조 정신을 가지고 대화와 외교협상을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각국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유엔 헌장의 형식과 정신을 훼손하고, 일중공동선언(1972년)과 일중평화우호조약(1978년)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지에서 천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단독 행위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건강한 지구에서 유엔이 권장하는 평화, 존엄,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6) 한반도 평화구축은 제9조 수호와 함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과 1953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의 요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이웃들 사이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북한과

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핵 폐기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가 모두 포함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시작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엄중히 지지해 줄 것을 모든 종교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상생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 믿는다.

7) 시민들의 애국주의적センチメント, 언론의 비난, 국가적 이기심은 모든 정부가 외교적 대화에 임하는 도덕적 의무로부터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의 시민과 종교계가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대화하며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 대 시민의 국제 연대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어떠한 군사력도 포기한 일본 헌법 9조의 정신이 세계 국민과 국가 간에 확산되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보, 진정한 존엄성이 도처에서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8) 끝으로 2021년 1월 22일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에 미국 등 모든 핵보유국들의 비준을 촉구한다. 이로써 우리는 마침내 전 세계가 핵 파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이루는 길이기도 한다.

평화를 만들고 갈등을 넘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우리는 이 공동성명을 발표 한다.

### 행 동 계 획

1. 2021년 5월 3일, 18시 후텐마 공군기지 앞에서 복음 그룹이 주관하는 시위에 NO! OSPREY, NO! RAPE, NO! BASE라는 연대 구호와 함께 동참하고, 2021년 5월 3일에는 오키나와의 단체들과 함께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를 부르며 각 자의 자리에서 연대 집회를 조직한다.

2.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일본인, 오키나와 시민, 한반도 출신 강제동원자)의 유해가 담긴 토사를 헤노코 신기지 매립지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데니 다마키 오키나와 지사에게 아래와 같은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다.

"다마키 지사는 쿠마노 광산의 개발을 막기 위해 지사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잔해가 안치되어 있는 토사를 기지 건설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팩스 +8198-866-2467 /이메일: [kouhou@pref.okinawa.lg.jp](mailto:kouhou@pref.okinawa.lg.jp)

3. 2021년 5월 3일(일본 헌법기념일) 전, 각 국 일본대사관에 "헌법 9조를 수호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4. "한국전쟁을 종식하라"는 종전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 <https://en.endthekoreanwar.net/>

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군사적 갈등 없이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중심 전략"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6. 현장 체험, 온라인 프로그램, 종교간 기도모임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청소년들이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지식, 경험,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2021년 3월 6일

일본 평화헌법 제9조 제7차 세계 종교인 협의회

참가자 일동